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韓·中·日 FTA 推進斗 對應戰略

指導教授 崔 泰 榮

이 論文 崔 泰 榮 提 出 함



2004年 2月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國際貿易學科(海運港灣管理專攻)

金 道 中

Thesis for Master Degree of Business Administration

**FTA Discussion and
Countermeasur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y

Kim Doh-Jung

Adviser : Professor Choi Tae-Yeong

Majoring in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04

金道中の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년 12월

主審 經濟學博士 崔 洪 錫



委員 經營學博士 尹 光 云



委員 經營學博士 崔 泰 榮



目 次

Abstract

제 I 장 序 論	1
제 1 절 研究의 背景 및 目的	2
1. 배 景	2
2. 목 적	4
3.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 2 절 FTA의 理解	6
1. 개 념	6
2. WTO와 FTA의 關係	7
3. 한국의 FTA 추진	11
제 II 장 FTA 推進의 必要性 및 經濟的 效果 · 展望	14
제 1 절 韓 · 中 · 日 FTA 推進의 必要性	14
1. FTA의 經濟적 必要性 인식	17
2. 韓 · 中 · 日 經濟關係 무역의존도	18
3. 동북아 3국 무역상품구조	23
4. 韓 · 中 · 日 域內무역과 地理적요인	25

제 2 절 FTA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28
1. 긍정적인 영향	28
2. 부정적인 영향	29
3.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30
4. 한국농업에 미치는 예상영향	31
제 3 절 韓·中·日 FTA 締結의 經濟的 效果·展望	35
1.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35
2. 한·일 FTA와 한·중·일 FTA의 효과비교	37
3. 한·중·일 FTA의 전망	41
제 Ⅲ 장 FTA의 推進 및 課題	43
제 1 절 FTA 推進事項	43
1. 한·중·일 FTA 추진	43
2. 한·일 FTA 추진	45
3. 중국의 FTA 추진	50
4. FTA 추진방향 및 각국의 입장	51
제 2 절 FTA의 課題	59
1. 한·중 FTA의 과제	59
2. 한·일 FTA의 과제	61

제 IV 장 FTA 問題點과 對應戰略	64
제 1 절 韓·中·日 FTA의 問題點	64
1. 농산물 교역문제	65
2. 산업구조조정문제	67
3. FTA 체결의 장애요인과 유의사항	69
제 2 절 北美·EU와의 關係	70
1. 대미 정치·경제적인 관계	70
2. 북미·EU와의 관계	72
제 3 절 FTA의 對應戰略	74
1.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75
2.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76
3. 농산물시장개방 대응전략	77
제 V 장 結 論	80
* 參考文獻	82

도 표 목 차

< I -1> 지역무역협정현황	11
< I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및 논의 현황	12
< II 1>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19
< II -2> 세계주요 지역별 역내교역비중 추이	20
< II -3> 중국 WTO 관세인하의 동북아무역에 관한 영향	21
< II -4> 2000년 한·중·일 세계무역 점유율과 무역의존도	25
< II -5> 한·중·일의 국가지역별 수출비중	26
< II -6> 주요 농업지표의 국제비교	32
< II -7> 한·일 FTA와 한·중·일 FTA 효과 예측	37
< II 8> 한·일 FTA와 한·중·일 FTA 효과 변화의 비교	39
< II -9>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실행액	40
< III 1> 한·중·일 정상 브루나이 회담 결과	44
< III -2> CGE모형에 따른 KJ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48
< III -3> KJFTA의 정태적·동태적 효과비교	48
< III -4>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단계	51

**FTA Discussion and Countermeasur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y
Kim Doh-Jung

Adviser : Professor Choi Tae-Yeong

Majoring in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priety of economic cooperati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propulsion tendency of Internal Free Trade Agreement (FTA)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rough the survey of economic relations and the degree of trade interdependence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n global regionalization trends. As the preconditions to carry out economic blocks of Northeast Asia,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in the FTA among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ogether with this, it is desirable to load the FTA with localized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ithin the APEC, which is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economic organization in terms of Korean standpoint.

The preconditions for FTA Discussion among thes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ruction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instance a financial infrastructure the expansion and a Northeast Asian FTA as an economic intergration organization; secondly, the expans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s such as airports, harbor facilities and overland transport network . Especially, SouthKorea must make a new turning point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constructing logistic networks among three countries - Korea, China and Japan , and this kind of scheme is sure to lead the Korean peninsula to be a central country of logistics and business in Northeast Asia; As the last thing, South Korea must move ahead strategically with a development plan in regards to the Korean west coast including a free trade zone.

제 I 장 序 論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국경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지역주의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계가 1960년대 초에 붕괴되고 WTO체제가 세계경제발전과 인류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세계경제의 다극체제를 모색한다는 취지아래 출범한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화(Regionalism) 현상이 병존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WTO체제가 표방하는 범세계적인 자유화조치가 세계 각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EU, NAFTA, EU-Mercosur(남미공동시장)등 지역 경제 협력이 선진제국에 의해 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WTO하의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세계경제 질서의 추구는 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의가 지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990대이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개방의 물결로 1992년 EC의 단일시장 통합과 일본 및 신흥공업경제(NIES)의 부상으로 세계경제가 다극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에 있어서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우위상실, 국가 간의 무역전쟁의 격화 각 국간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의존도의 심화 등 세계경제의 다원화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역사는 길지 않지만 WTO 회원국들 대부분이 이 협정을 맺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WTO출범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가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역주의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FTA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최근 칠레와 최초로 FTA협정을 맺기 위해 진행중에 있고 그의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도 FTA협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체결에 이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이미 개진한 바 있고 때늦은 감은 있으나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처럼 오늘날 FTA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중·일 FTA는 필연적 과제이며 세계경제의 신지역주의적 관점에서 韓中日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당위성을 찾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점 고찰을 통해 대응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研究의 背景 및 目的

1. 背 景

본 연구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FTA 추진은 시대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면서 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이 계속 확대·심화됨으로써 지역무역협정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우리정부에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는 한국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1)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FTA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블록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한국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FTA는 자국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로부터 쉽게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 1994년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음

칠레와의 FTA 협상타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경제지역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발전을 향후 5년 간 국정운영 좌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교통, 불류, 에너지, 통신등 분야별 협력강화와 동북아 FTA를 구축함으로써 부문별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이성태 「FTA세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봉출판사 2001. 11

그러나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핵심이슈가 되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요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될 경우, FTA는 국내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국내시장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저관세 내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요인을 갖게되어 FTA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FTA 체결국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활동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2. 目 的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고 신기술개발과 수출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무한경쟁시대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의 페러다임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응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볼 때 우리는 정치, 문화, 경제의 성격이 유사하고 지리적 인접국가인 일본·중국과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어야하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FTA 추진 목적이 EU 확대와 NAFTA가 EEA(유럽경제지역)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일본과 중국의 구상과 정책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이 구축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가 성사되면 세계경제는 동아시아, EEA 및 광역 EU의 3대 경제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세계경제가 다자주의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²⁾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일련의 국제경제상황에 유념하고 특히 유럽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an Meeting) 출범을 계기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라는 지역협력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측 대응으로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아직 어떠한 지역협력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개별 국가적 대응은 비 대칭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된 국제범죄, 환경, 마약문제 등 지역차원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의 이슈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시아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공동체 형성의 추진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일본·중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체결을 통한 동북아 지역협력 모색의 범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3. 研究方法 및 構成

본 논문은 세계경제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방 정책방향에 근거를 두고 국내외경제의 흐름을 파악 분석하여 지역간, 국가

2) 지역무역협정은 개별국들이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촉진되며, 특히 WTO와 같은 다자체제를 통해서만 충족될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작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추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해 개별국의 경제적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간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성향이 비슷하고 지리적 인접국가인 한국·일본·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전망 등을 도출해보고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문 경영 경제인의 기고 및 월간무역지,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기타 자료에 의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WTO와 연계한 FTA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어 제Ⅰ장 서론에서부터 제Ⅱ장에는 한·중·일 FTA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전망, 제Ⅲ장 FTA의 추진 및 동향, 제Ⅳ장 FTA문제점과 대응전략 제Ⅴ장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 2 절 FTA의 理解

1. 概 念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 FTA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WTO와 FTA의 關係

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 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1)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

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³⁾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2)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3) 문영훈(2002)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고시연구)2002. 12월호

(3)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關稅同盟의 創設 許容條件)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自由貿易地帶의 創設 許容條件)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關稅同盟의 正義)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自由貿易地帶의 正義)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3. 韓國의 FTA 推進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多者貿易體制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多者貿易體制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표 I -1> 지역무역협정현황

(2000년 7월 현재)

구 분	발효중인지역무역협정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	
	FTA	관세동맹	FTA	관세동맹
개 수	148	24	67	1

※ 자 료 :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

우리나라는 FTA 정책 추진을 UR에서 농산물개방을 둘러싼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산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해수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 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1998년 11월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의 FTA추진을 결정하였으며 1999년 12월부터 6차례협상

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협정 외에도 일본,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등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1999년에 일본과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일 양국은 FTA 비즈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차원에서 양국간 FTA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I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및 논의 현황(칠레 제외)

구 분	시 점	내 용
한-일 FTA 합의	1998. 10 2002. 3 2003. 7 2003. 10	김대중 대통령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 한일 정상 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공동연구회 설치 제6차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개최(일본) APEC정상회담시 FTA를 2005년까지 타결목표 협상합의
한-싱가폴 FTA을제안	1999. 9 2002. 10	APEC 정상회담시 고축통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제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
관학공동	2002. 11 2003. 3	양국 통상장관회담(시드니)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 제1차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개최(서울)
한-중-일 FTA		논의중
한-멕시코 FTA		"
한-아세안 FTA		"
한-태국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유럽 자유무역 연합 FTA		"

2003. 10. 20 방콕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시 한·일 양국회담에서 FTA를 2005년내에 실질적 타결목표로 협상에 합의하였다.

또한, 태국과 뉴질랜드와도 FTA체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였는데 먼저, 태국과의 경우를 보면, 1998년 11월 14일 한·태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년 11월 1일 제11회 한·태 무역공동위에서 공동연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정부는 연구기관을 지정,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측에서 우리와의 FTA체결의사를 피력해 와 이에 2002년 10월 16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2003년 10월에 韓·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4)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FTA체결을 위한 산, 관, 학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양국대표는 공동 연구회를 구성하여 한·싱가폴간 FTA교섭에 대한 양국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상범위 및 대상분야의 협상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ead Agreement)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부과하는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 통상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원칙적으로 관세율이 제로수준으로 낮춰지고 무역 장벽도 없어져 상품, 투자, 서비스등의 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제Ⅱ장 FTA 推進의 必要性 및 經濟的 效果·展望

제1절 韓·中·日 FTA 推進의 必要性

한국은 지금까지 WTO(세계무역기구)가 추구하는 多者主義체제와 무역 자유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과 ASEM(아시아 유럽회의: Asia Europe Meeting)을 통한 이의 달성을 유도해 왔으나 세계화 및 자유화의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의 경우 총GDP(국내총생산)의 50%이상을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 WTO회원국 중 단일국가로는 중국과 함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주의에 의한 차별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는 WTO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급증하여 세계 각 국의 규모가 크던 작던지 간에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FTA를 통해 선진기술도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블록의 배타적인 차별정책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시장확보라는 잇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FTA협상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어느 지역 국가들에 못지 않게 상호 협력이 필요한 인접 국가들로서 세계에서 이 세 나라처럼 정치, 경제, 문화, 및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국가들은 흔치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건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없다.

2002년 9월 현재 FTA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무역은 이미 40%에 달할 정도이며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국가들끼리도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거나 적어도 추진 중에 있고 미국은 2002년 12월 현재 52개국과 FTA 협상중이거나 협상추진에 합의한 상태로서 체제 전환국들까지도 기존의 FTA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WTO체제에서 지역협력체의 세계무역확대에 대한 공헌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중요한 무역문제나 통상이슈는 지역협력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 될 수밖에 없으며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개별 국가들의 협상에서보다 지역협력체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WTO체제에서 지역 협력체로부터 고립된 국가들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경제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한·중·일 3국 가운데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물론 한국이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 경제적 영향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도 지역경제공동체 밖에 있는 한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일본은 비록 미국, EU 및 캐나다와 함께 “WTO 4강” (Quad - power)이라고 하더라도 15개국이 연합한 EU나 NAFTA로 결속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 그 영향력과 협상력은 연세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국이고 홍콩과 무역규모를 합치면 세계 4대 교역국의 위치에 서게 되지만 역시 EU나 NAFTA에 단독으로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여기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협력의 또 하나의 추세는 세계의 지리적 분할구도를 초월하여 지역협정들간의 상호연계가 이루어져 EU와 MERCOSUR(남미공동시

장) 간에는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위한 기본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과 EU간에도 1995년 12월에 합의된 “대서양 횡단 실행계획”(Trans -Atlantic Action Plan)에 따라 TAFTA(대서양 횡단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협상중인 남북아메리카 국가들간의 FTAA(미주자유무역)가 2005년에 출범하면 TAFTA는 FTAA와 EU의 연계로 귀착될 것이며 이밖에도 미국은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및 ASEAN과 별개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NAFTA, ASEAN 및 ANZCERTA(호주뉴질랜드 경제협력 긴밀화협정)가 포함된 APEC이나, EU와 ASEAN이 참가하고 있는 ASEM도 일종의 지역협정간의 연계체계이기는 하나 APEC 5)은 개별국가들로 구성되고, ASEM 6)에도 한·중·일 3국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앞의 지역연계체제와는 크게 다르다.

APEC과 ASEM이 확실한 지역연계체제가 되고 한·중·일 3국이 그 안에서 공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3국간 자유무역지역 구축은 필요하며 과거 지역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의 지역협력 형태일 뿐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과 소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체계 안에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를 요구하는 정보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지역주의는 이러한 생산과 소비에 맞춘 신축적 국제분업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산업의 비교우위가 급속히 바뀌고 국제적 경쟁과 보완관계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러한 급속한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5)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6) ASEM의 기본원칙은 협상의 장도 아니고 규범제정의 장도 아니며 단순한 협력의 장일 뿐이다.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표현하는 협력의 장일 뿐이며 일본이 APEC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ASEM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 동북아 3국(한, 일, 중) ASEM 7국(필, 말, 브, 인니, 태, 싱, 베) EU 15개국등 25개국으로 되어 있다.

1. FTA의 經濟的 必要性 認識

(1) 韓中일 지역협력이 가져올 經濟的인 效果

3국 모두 國際的인 무역大國이며, 經濟規模, 人口, 投資 比重等이 높아 FTA체결시 相當한 經濟的 效果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현재 까지 지역협력의 미비로 시장장벽이 比較적 높고, 무역자유화 速度가 느려 域內 성장잠재력 및 교역잠재력이 제약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 상호 보완성 및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 전망

中國의 노동력, 韓國의 商品개발 能力, 日本의 高급기술을 活用한 수직적 分業이 가능하여 상호간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많아 비슷한 經濟 발전 단계로 수평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안에 비해 日本, 韓國 과 협력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3국간 FTA 체결 시 中國의 노동력을 活用하기 위한 韓國과 日本 제조시설의 中國 이전으로 中國은 世界 最大의 製造業 生産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3) 기 타

經濟협력을 통한 日本과의 관계 개선 및 역사문제 해결과 中國의 市場개 혁과 개방형經濟 구축을 촉진하고 中國經濟의 세계화를 위한 학습효과 기대 와 수출 의존적 經濟구조 하에서 우리 의 安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經濟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 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 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國家와의 지역협 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한·중·일 經濟關係 貿易依存度

(1) 3국 무역관계

아시아 금융위기기간을 도외시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한-중-일 3국간의 무역관계는 안정적인 지속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 간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무역관계에서 경제권역과 연관지어 볼 때 특징적인 것은 한-일 간 교류를 제외한 한-중, 한-일간의 경제무역협력은 모두 현저한 황해지향형에 속하며, 환황해경제권의 일정한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황해지역의 韓中-日(북한포함)간 무역투자, 인적교류 등 총체적 경제협력 면으로 볼 때, 환황해지역이 동북아 기타지역 보다 훨씬 앞선 것이 뚜렷하며, 이는 또한 기타지역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시장은 한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규모가 점증하게 될 것이다. 과거 1994년도 중국의 GDP는 세계 GDP총액의 2%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추세로 지속성장을 한다면 2010년에는 5%, 그리고 2025년에는 1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동부연안지역에 의해 계속 견인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말미암은 환황해경제권 형성은 자연스런 귀결이 될 것이다.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수출입면에서 상호 4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상대국이다.

〈표 II-1〉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2000년)

	한 국				일 본				중 국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1	미국	29,745	일본	25,142 (20.0)	미국	128,218	미국	67,066	미국	42,016	일본	33,778 (20.3)
2	일본	15,862 (11.0)	미국	24,922	대만	28,761	중국	42,800 (13.8)	홍콩	36,917	대만	19,537
3	중국	13,685 (9.5)	중국	8,867 (7.4)	중국	23,329 (5.58)	한국	16,015 (5.1)	일본	32,420 (16.6)	미국	19,488
4	홍콩	9,048	사우 디아 라비 아	5,664	한국	22,879 (5.48)	오스 트레 일리 아	12,790	한국	7,817 (4.0)	한국	17,232 (10.3)

즉, 한국의 관점에서 일본은 총수출에서 11.0%의 비중을 차지하는 2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총수입에서는 20.0%를 점유하는 1위의 수입대상국인 반면, 중국은 한국 총수출의 9.5%(3위), 총수입의 7.4%(3위)를 점유하는 교역국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총수출에서 4.0%, 총수입에서 10.3%를 차지하여 수출·입 면에서 공히 4위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며, 일본은 중국 총수출의 16.6%, 총수입의 20.3%를 점유하여 각각 3위와 1위의 교역상대국이다.

한편, 일본을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 총수출의 5.48%, 총수입의 5.1%를 점유하는 무역파트너이며, 중국은 일본 총수출의 5.58%, 총수입의 13.8%를 점유하는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3국간 수출·입 비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출과 수입면에서 한국이 상대국에서 가장 낮은 무역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상대국의 수입면에서 동일하게 2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1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Ⅱ-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18.6%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치고는 높은 역내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와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Ⅱ 2〉 세계주요지역별 역내교역비중 추이 (1996-2000)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동북아 3국 (한중일)2)	17.9	17.5	16.0	17.6	18.6
ASEAN	22.1	21.9	21.2	22.1	23.6
동아시아	36.6	35.2	31.5	33.9	33.9
NAFTA	42.1	43.7	45.0	46.2	45.3
EU	60.9	59.7	60.6	61.2	60.2

APEC이나 EU에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무리이지만, 한국의 IMF구제금융 시점인 1997년도 현재 APEC은 72.0%, EU가 59.9%, 동아시아가 48.7%, NAFTA가 44.1% 그리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역내무역 비중이 22.6%를 기록하였던 것에 비하면 역내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지역에 비해 역내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역무역협정의 미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구조와 광역역내시장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3국간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 이후 3국간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Ⅱ-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의 對세계 수출증가액과 수입증가액인 123억 달러와 117억 달러 중, 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증가액이 각각 28억 달러와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의 총증가액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8%와 37.6%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Ⅱ-3〉에 의하면 중국의 對세계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對한국, 對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무역수지가 각각 9억 6천만달러, 6억 6천만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표Ⅱ-3〉 중국 WTO 관세인하의 동북아무역에 관한 영향

수출입		지역	중 국 의		무역수지변동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對 세계			123(100%)	117(100%)	6.4
對동북아	소 계		28(22.8%)	44(37.6%)	-16.2
	한 국		3(2.4%)	13(11.1%)	- 9.6
	일 본		25(20.3%)	31(26.5%)	- 6.6

그렇지만 한·중·일 3국의 산업간 교역에 미치는 중국의 시장개방 효과는 주로 자동차, 섬유, 및 의류산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북아 3국의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섬유, 의류, 플라스틱 제품, 철강, 차량 및 부품, 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등에 한정될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임산물, 어패류 및 기타 수산물, 합성 고무 등은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동북아 3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내교역 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3국 중, 한국은 일본의 기술경쟁력,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D 개발 노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초하여 중국시장 공략을 모색하고 제조업 위주의 현지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브랜드이미지 관리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양화시키는 고도의 기업경쟁전략이 필요시 되고 있다.

3. 東北亞 3國 貿易商品構造

한·중·일 3국은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점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역형태도 산업간 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즉, 원부자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섬유, 의류, 신발, 모자류, 광물성 생산품 등은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가공하는 형태의 산업내 분업구조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동북아 3국의 품목별 세계전체 수출과 세계전체 수입에서의 비율을 한자리 품목분류로 분석해 보면 7), 한국과 일본이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분야에서 세계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연료를 제외한 비식용원재료와 광물성 연료 및 운할류 등의 분야에서 세계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식품 및 산동물 분야에서 세계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에서 수출 지향적이며, 동식물유지, 비식용 원재료 등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수입 지향적이다. 그러나 한국이 화학물 및 관련제품에서 수입 지향적이고, 기타 제조품목에서 수출 지향적인데 반해 일본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타 제조식품, 음료 및 담배, 식품 및 산 동물 등의 분야에서 수출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며, 동식물유지, 화학물 및 관련제품, 비 식용 원재료 등의 분야에서 수입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7) 남상열 “동북아시아 3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9)

이와 같이 3국간 무역상품구조에서 각 국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 및 산동물, 광물성연료 및 운할류 등의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수입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나,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수출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화학물 및 관련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수출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나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수입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 일방향으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강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일국의 총수출 구조와 상대국의 총수입구조가 매우 흡사하여 무역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의 對일본 수출에 비해 잠재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증대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3국의 무역상품구조에서 고관세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주로 농산물에, 중국은 차량, 기계류, 전기기기, 천연 및 양식진주 등에, 일본에 신발류와 원피 및 가죽 등에 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통상규범이 아직 미 정착된 중국이 있기 때문에 3국간 무역에서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위생 및 검역 표준 및 인증, 정부조달요건 등의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통관절차, 표준 및 인증, 정부조달절차 등이다.

이러한 통관절차는 역내 한국 및 일본 기업체들이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중국의 WTO가입으로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개선된다면, 역내 교역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WTO 가입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역내 상품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과 보완적인 자본·기술 집약산업은 중국 경제의 팽창과 더불어 확대되지만, 중국과 더불어 경합해야 하는 노동 집약산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중·일 域內貿易과 地理的 要因

한·중·일 FTA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3국간 域內貿易이다. 한·중·일(홍콩 포함) 무역 합계액의 세계무역 비중이 3국 GDP 합계의 세계 GDP 비중에 비해 낮은 점도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래 <표Ⅱ-4>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3국(홍콩 포함) GDP 합계의 세계 비중은 20.2%(홍콩 제외시는 19.7%)이다. 그러나 <표Ⅱ-4>에서 보는 것처럼 3국(홍콩 포함) 무역 합계의 세계 비중은 16.2%(홍콩 제외시는 13%)에 불과하다.

<표Ⅱ-4> 2000년 한·중·일 세계무역 점유율과 무역의존도

구 분	한국(A)	일본(B)	중국(C)	A+B+C	홍콩(D)	A+B+C+D	미 국
세계무역점유율	2.6	6.7	3.7	13.0	3.2	16.2	16.0
(수출점유율)	(2.8)	(7.7)	(4.0)	(14.5)	(3.2)	(17.7)	(12.5)
(수입점유율)	(2.5)	(5.8)	(3.5)	(11.8)	(3.2)	(15.0)	(19.3)
무역의존도	72.8	18.1	44.5	26.5	254.2	32.2	20.4
(수출의존도)	(37.7)	(10.1)	(23.4)	(14.3)	(124.6)	(17.1)	(7.8)
(수입의존도)	(35.1)	(8.0)	(21.1)	(12.2)	(129.6)	(15.1)	(12.6)

홍콩을 포함한 3국의 세계무역 점유율은 미국의 점유율(16.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은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데서 기인한다.

한·중·일 3국의 세계 지역별 수출은 미국, 동아시아(한·중·일 제외) 및 EU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동아시아의 비중보다 낮아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의 감소는 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으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을 중국에게 잠식당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 역시 미국으로 일본의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한때 동아시아보다 낮아진 적은 있으나, 매년 미국은 일본 수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표Ⅱ 5>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이 큰 것은 거기에 중국의 수출창구인 홍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한·중·일 3국간의 역내무역에서는 일본이 단연 한국과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표Ⅱ 5> 한·중·일의 국가 지역별 수출비중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1980	1985	1990	1995	2000	1980	1985	1990	1995	2000	1980	1985	1990	1995	2000
한국						4.1	4.0	6.1	7.0	6.4	0.0	0.0	0.7	4.5	4.5
일본	17.4	15.0	19.4	13.6	11.9						22.2	22.3	14.7	19.1	16.7
중국	0.1	0.1	0.9	7.3	10.7	3.9	7.1	2.1	4.9	8.3					
동아	12.6	10.9	15.8	26.0	22.6	23.7	18.8	28.8	30.3	27.5	30.6	36.6	49.9	33.3	26.9
미국	26.3	35.5	29.8	19.3	21.8	24.5	37.6	31.7	27.2	29.7	5.4	8.5	8.5	16.6	20.9
EU	15.5	10.7	15.7	13.0	13.6	13.2	11.7	18.6	15.9	16.3	13.7	8.7	10.0	12.8	15.3
중동	14.6	9.5	4.0	3.9	4.4	11.1	6.9	3.4	2.2	2.3	4.6	6.9	2.7	2.0	3.2
남미	2.8	3.6	3.2	5.9	5.4	6.8	4.8	3.6	4.4	4.4	1.8	1.8	0.8	2.1	3.3
기타	10.7	14.7	11.5	10.9	9.6	12.7	14.5	9.1	7.0	7.0	21.7	15.2	12.7	9.5	15.4

※ 자 료 : IMF

일본의 수출상대로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변성도 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커져 2000년에는 10.7%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1995-2000년에 4.5%에 머물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시장의 개방과 한·중 수교 등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증가추세가 유지되었다. 1990년에 약 11%이었던 역내무역비중은 1996년에 20.2%까지 커졌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그 비중은 1998년에 16.9%까지 작아졌다가 1999년에 1996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00년에 다시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했다. 한·중·일 3국간 역내무역비중은 현존하는 무역권역들에 비하면 크지 않다.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보면, MERCOSUR(남미공동시장)만이 20%로 한·중·일 역내무역 비중과 비슷할 뿐 ASEAN (21.6%)보다 낮고 NAFTA(46.5%)에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중·일 3국 역내무역의 비중과 결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상호교역이 아무런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교역은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한 단순한 거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경우에 역내무역의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Ohnishi and Yin(2002)이 예측한 것을 보면, 한·중·일 3국의 FTA가 성사되는 경우에 국별 역내무역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역내무역비중은 FTA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FTA 이후에 급증하고, 일본은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FTA 이전에 등락이 교차하다가 FTA이후에는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이 구축되는 경우에는 세 나라가 인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국가들(예컨대, ASEAN)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역내무역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Krugman(1995)의 지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자연적 무역권”(natural trading bloc)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교통과 통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교역은 주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2절 FTA가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1. 肯定的인 影響

첫째 급속도로 증가 일로에 있는 지역주의화로 인해 입계될 배타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고 대외 협상력이 향상된다. 최근 미국 및 EU 등으로부터 한국의 섬유제품 등이 반덤핑판정을 받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관세가 철폐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수출이 증대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부족한 자본과 자원 및 선진기술의 도입이 유리해져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넷째, FTA 가맹국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국내의 부적합한 사업이 퇴출되거나 선진기업과의 합병 및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그간 외국기업들로부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가맹국의 불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의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 및 규제개혁을 통해 이에 대한 외국의 불만을 감소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섯째, 국내 투자여건의 개선과 제도 및 개혁의 완화와 투명성 확보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일곱째, 경제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국들의 협조와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쉬울 것이다.

여덟째,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성장과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 否定的인 影響

첫째, FTA 체결에 의해 가맹국들의 무리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국내경제가 충분히 외국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타격이 클 것이다.

둘째, 국내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는 등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는 시장개방에 의해 국내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역조현상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국내소비자의 외제 선호사상을 부추겨 소비구조가 왜곡되는 피해를 입기 쉽다.

셋째, 국내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 자유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산업과 전략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에 의해 도산할 우려가 높다.

넷째, 국내의 관행 및 제도에 있어서 국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의 부리한 개선요구가 한국에 불합리하게 작용됨으로써 자칫 주권침해와 국내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FTA협정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도 FTA협상 추진시 최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FTA체결이 경제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韓 · 日 FTA 締結時 豫想되는 影響

우리나라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할 경우 단기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이 강화돼 전체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FTA를 체결한뒤 1~2년 정도는 대일무역수지적자가 연간 60억 9000만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나 일본 부품가격이 떨어지는 등 우리 수출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는 아시아의 FTA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중인 일본이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국내제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FTA 조기타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경제가 블록화 하는 상황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동북아시아를 묶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시발점이 한·일 FTA라고 볼 수 있다.

한·일 FTA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합쳐 인구 1억 7천만명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우리 기업이 국내시장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일 FTA는 특히 한·칠레 FTA와는 달리 농업계의 반대가 없는 것이 장점이며 한·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의 일본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일수출이 늘어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이나 한·일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기계·철강·전자등 공산품시장에서 일본제품의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업계는 한·일 FTA의 조기 추진시에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FTA협상에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을 보장 받아야할 것이다.

한·일 FTA는 일본의 국내투자 증가와 부품산업이전 등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일본기업과 직접 경쟁함에 따라 국내산업구조가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FTA를 체결해도 일본의 투자 및 산업 이전은 환상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상품의 일본수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 일본의 비관세장벽(수출품에 국산품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견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4. 韓國 農業에 미치는 豫想影響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의 농업특성 즉 주요수출품목 생산성 등을 비교하는 것보다 국가 특정적(country-specific)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이 경쟁우위요인이 다양한 많은 품목의 소산업(segments)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품목별 교역가능성(tradability)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체결 대상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경쟁력 분석은 필요한 자료의 방대함

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농지 면적과 호당 영농규모를 생산성의 기본적인 측정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 수출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FTA가 체결되더라도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생산성이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수출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하에서 경쟁력 측정을 위한 농산물 수출국들과 비교한 주요 농업지표는 아래의 <표Ⅱ-6>와 같다

<표Ⅱ-6> 주요 농업지표의 국제비교

구 분	한국1)	일본2)	미국	캐나다	호 주	EU
농지면적(백만ha)	2.1	4.99	391.76	68.06	463.00	128.37
국토면적대비 농지면적(%)	21	13	42	7	60	40
농가(1만호)	148	339	206	28	12	734
농가당 평균 농지(ha)	1.3	1.6	189.9	246.1	4,011.1	17.5
국민1인당 농지면적(ha)	0.04	0.04	1.5	2.3	25.6	0.3

위의 <표Ⅱ-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농업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총 농지면적, 호당 경지면적과 국민 1인당 할당되는 농지면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에 비하여 아직도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농지의 절대규모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단위 농지당 부양해야 할 인구수 또한 많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게 되면 농산물의 대규모수출국이며 동시에 대규모 수입국으로서 중국은 인접국인 한국의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FTA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그 상대

국이 어디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각종 국경조치(높은 관세, 고관세할당 및 국영무역 등)와 가격지지 등 높은 구내보조로 농업을 유지해 온 한국 농업으로서는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대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일정부분 점유하여 국내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모든 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참여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하되 이행기간을 부여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FTA는 주로 2국간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 관한 비교우위론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교우위 상품에의 생산특화와 수출 및 비교열위 상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산업 부문별소득의 변동과 함께 요소가격의 장기적 균등화 경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들을 한국농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가격에의 영향이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상대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수요가 안정적이며 저장성이 약하여 곡물 등 보관이 가능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성이 대단히 큰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 농가소득에의 영향이다. 상대국과의 무역자유화가 국내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의 이전 즉, 전반적인 농업생산의 하락과 농업 내부에서 보다 경쟁력

이 있는 품목으로의 작목 전환 등 2가지 경로(channel)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이외의 별다른 소득요인이 없어 외부와의 거래가 거의 없는 농지상황과 고령화된 영농인력 등 농업의 인적자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번째 경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농업내 작목 전환도 일부 의욕적인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용이한 상황이 아닌 현실을 감안하면 상대국 농산물의 진입으로 인한 관련 품목 농가들의 소득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촌경제에의 영향이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관련 농가소득의 감소는 우선 탈농 현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탈농은 농촌에 남아있으며 농업이외의 타부문으로부터의 소득 혹은 도시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거나 농업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따른 농촌경제의 영향은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이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농촌을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은 교통문제, 범죄, 도시슬럼화 등 전형적인 도시문제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체결로 인하여 예상되는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감소, 탈농에 따른 농촌 노령제에의 영향과 농업이 지니고 있는 양(+의 외부성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농업이 그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나 FTA 체결시 농산물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韓·中·日 FTA 체결의 經濟的 效果·展望

1. FTA締結의 經濟的 效果 8)

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로 구분되며 무역창출효과 9)는 역내 관세의 철폐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상품을 값싼 역내회원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으로 관세로 인해 야기되던 교역구조의 왜곡이 시정되어 역내에서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교역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증대로 생산량이 증대되면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무역전환 효과 10)는 FTA가 역내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역외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수입선이 역외에서 값싼 역내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FTA는 무역은 물론 투자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통합되면 시장확대에 따른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는 투자 창출과, 역외국에서 역내로 투자가 이전되는 투자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FTA 체결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역내국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격결정력이 강화되는 데 따른 교역조건 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동태적 효과도 나타난다.

8) 김동만 자유무역협정과 정책적 합의 2002

9) 관세동맹결성으로 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종래 관세 보호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 상품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역내 타국의 싼상품이 수입됨으로서 무역이 새로 창출되는 효과

10) 관세동맹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국내의 비싼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

이러한 동태적효과는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이익, 역내기업간 경쟁 촉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생산요소 이동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역내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FTA에 따른 산업 재배치 현상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역내 특정국가의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모이는 집적현상(agglomeration effect)에 주목하고 있다.

한 국가내에서도 몇몇 산업이 특정지역에 모이는 것처럼(우리나라의 경우 청계천의 헌책방, 동대문의 옷가게, 경동시장의 한약상 등) FTA로 역내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 새로운 기회를 쫓아 새로운 역내 산업지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내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자국에 어떤 산업이 얼마나 이전해 오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WTO 출범 이후 FTA는 과거의 FTA와 그 성격이 매우 달라졌다. 이전에는 FTA가 주로 상품의 관세철폐를 대상으로 했지만 WTO이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됐으며 위생 및 검역,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 전 검사,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술장벽 규정, 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FTA의 추세는 직접투자, 환경조치,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등의 분야까지도 포괄함으로써 FTA의 범위가 오히려 WTO의 포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FTA의 추진에는 우선적으로 협정 대상국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이어 비교우위 변화와 산업 재배치 차원에 의거한 경제적 평가, 그리고 자국시장 편중 현상과 같은 사회, 문화적 평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2. 韓 · 日 FTA와 韓 · 中 · 日 FTA의 效果 比較

한국, 일본 및 중국이 포함된 쌍무적 또는 다자간 FTA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모두 <표Ⅱ-7>에서 보는 것처럼 쌍무적인 한·일 FTA보다 한·중·일 FTA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Ⅱ-7> 한·일 FTA와 한·중·일 FTA 효과 예측

구분	연구자	국가	GDP	무역	산업생산
한일 FTA	KIEF	한국	-0.07%	33.6억달러 적자	섬유(+).일반기계.정밀기계(-)
	KIEF	한국	-0.07%	60.9억달러 적자	의복.피혁(+).중화학공업(-)
		일본	+0.04%	n.a	n.a
	IDE	한국	+0.3%	무역수지 -37.1%	n.a
		일본	+0.0%	n.a	n.a
	Brown 등	한국	+32억 달러	수출 +84억 달러 수입 +75억 달러	농업.노동집약사업(+) 서비스 산업(-)
	일본	+274억 달러	수출 +83억 달러 수입 +91억 달러	내구성 제조산업(+) 농업.노동집약산업(-)	
한일중 FTA	KIEF	한국	+1.27%	대한 -89억달러 대중 +163억달러	섬유.수송장비(+) 기계장비.음식료업(-)
		일본	+0.23%	대일 +89억달러 대중 +241억달러	섬유(+) 농산물.수송장비(-)
		중국	+0.11%	대일 -163억달러 대중 -241억달러	농산물(+) 운송장비(-)
	김영한	한국	+0.20%	수출 +0.70% 수입 +1.64%	섬유.음식료업(+) 농산물.금속(-)
		일본	+0.03%	수출 +0.28% 수입 +0.35%	음식료업.광업(+) 농산물(-)
		중국	+1.08%	수출 +4.13% 수입 +4.05%	섬유(+) 운송장비. 금속(-)

* 자료 : KIET : 산업연구원(1999). KIEP : 대외경제연구원(2000), IDE(2000)

KIEP는 한·중·일 FTA가 한국의 對일본 무역수지와 중국의 對한국 및 對일본 무역수지의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지만 김영환은 3국의 무역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표Ⅱ-8>는 Ohnishi and Yin(2002)이 Keynesian의 국민소득 수요결정 모형과 1990-1999년 시계열 자료를 써서 OLS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에 따라 GDP와 무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간이 1년 간격으로 단기에서 10년까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FTA의 파급영향이 고찰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 분석에서 판단이 유보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분석결과에서도 한·일 FTA보다 한·중·일 FTA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더 크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확대이익도 기대된다. <표Ⅱ-8>에서 한·중·일 FTA의 경우에 3국 모두 수출과 수입의 증가가 뚜렷하다. 그것은 물론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때문이다.

한·일 FTA와 한·중·일 FTA 초기에 중국의 항목들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이고, 후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 효과로 전환되지만 한·중·일 FTA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강한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항목들은 대체로 100차 연도에 효과가 감소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3국 FTA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의 구축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3국 FTA의 마이너스 효과가 한국보다 일본이세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대중국 투자규모가 한국보다 큰 결과이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韓·中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외환 위기로 1999년까지 감소했지만 2000년부터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표Ⅱ-8> 한·일 FTA와 한·중·일 FTA 효과 변화의 비교

(단위 : %)

항목	구분	국가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8차년도	10차년도
GDP	한일 FTA	한국	1.89	0.43	0.13	0.09	-0.04
		일본	0.09	0.10	0.08	0.09	0.02
		중국	-0.20	0.08	0.21	0.27	0.97
	한일중 FTA	한국	1.94	0.51	0.26	0.13	-0.30
		일본	0.04	0.03	-0.02	-0.09	-0.31
		중국	-0.43	0.01	0.38	0.61	0.67
소비	한일 FTA	한국	1.05	0.67	0.33	0.15	-0.04
		일본	0.04	0.09	0.08	0.08	0.04
		중국	-0.26	-0.04	0.14	0.22	0.59
	한일중 FTA	한국	1.04	0.71	0.43	0.21	-0.01
		일본	-0.01	0.02	-0.01	-0.07	-0.31
		중국	-0.49	-0.15	0.22	0.47	0.64
투자	한일 FTA	한국	0.00	0.54	0.28	0.36	3.67
		일본	0.10	0.10	0.09	0.10	0.03
		중국	-0.10	-0.08	0.20	0.23	1.02
	한일중 FTA	한국	5.63	0.52	0.44	0.07	-0.37
		일본	0.03	0.02	-0.04	-0.12	-0.37
		중국	-0.17	-0.36	0.30	0.25	0.80
수출	한일 FTA	한국	1.46	1.34	1.22	1.02	1.69
		일본	0.84	0.76	0.75	0.70	0.72
		중국	0.51	0.84	0.95	1.12	1.18
	한일중 FTA	한국	1.99	1.92	2.10	1.69	1.23
		일본	1.04	1.08	1.22	1.18	1.10
		중국	2.94	4.01	4.61	6.33	5.58
수입	한일 FTA	한국	3.19	1.70	1.53	1.41	2.65
		일본	0.59	0.75	0.82	0.75	0.45
		중국	-0.55	0.21	0.60	0.91	0.43
	한일중 FTA	한국	3.52	2.14	1.14	2.69	1.95
		일본	0.91	1.25	1.56	1.71	1.97
		중국	0.26	2.94	3.88	5.99	5.15

* 자료: Ohnishi and Ym(2002)

* 주: 연도는 FTA 체결후 경과 연도임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표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배정도 큰 것을 알 수 있고 1997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0년까지 감소하였다. 중국 FDI 유입총액 중 일본의 비중은 1990년 이후에 감소추세이다.

1997년까지 일본의 대중국 투자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감소한 것은 미국, 유럽 및 중남미로부터 투자 유입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표Ⅱ-9>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실행액

(단위 : 백만 달러, %)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액	3,487(100)	37,521(100)	42,135(100)	52,387(100)	43,712(100)	40,319(100)	40,715(100)
한국	-	1,043(2.8)	1,509(3.6)	2,227(4.3)	1,803(4.1)	1,275(3.2)	1,490(3.7)
일본	503(14.4)	3,109(8.8)	3,692(8.8)	4,390(8.4)	3,400(7.8)	2,973(7.4)	2,916(7.2)

* 주 : 괄호안 숫자는 중국의 FDI유입 총액에 대한 비중

* 자료 :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호 China F92002)

그러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일본 제조업체의 중국 내 생산기점은 2001년 말에 722개로 북미 692개를 능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한·중·일 FTA로 인해 일본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일본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여 검토해 볼 때 한·중·일 3국은 2국간 FTA보다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FTA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의 학자들도 쌍무적 FTA보다 한·중·일 또는 한·중·일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에 동조하고 있다. 11)

11) Hai and Zhang(2001)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일 FTA가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한·중·일 및 홍콩의 FTA를 주장하였다.

3. 韓·中·日 FTA의 展望

그 동안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양국 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1999년 11월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마닐라에서 회동하였을 때 3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역내 FTA 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기대된다.

아시아의 장래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부존 요소의 보완성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데,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등은 3국간 경제협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3국간 FTA 추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며 경제통합에서 투자확대, 경쟁촉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태적 효과가 무역장벽철폐의 정태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동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3국간 무역자유화가 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정하여 한국, 일본, 중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역내국가에 대해 27억달러, 606억달러, 240억달러의 신규 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1073억 달러의 무역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간 신뢰구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중국이 중심이 된 거대화경제권에 대한 일본의 견제,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자칫 선-개도국 간 불균등 수직통합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의 중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한·중·일 3국이 당장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이를 중국에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이 수십년 동안 논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참고할 때, 동북아 3국은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싱가포르간 FTA 체결, 한국·칠레간 FTA 체결, 중국과 ASEAN간 FTA 체결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때, 한·중·일 3국간 FTA 논의도 급 물살을 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경제 블록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바, 향후 동남아시아의 AFTA와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Safe 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 :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과정에서 농산물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제Ⅲ장 FTA의 推進 및 課題

제1절 FTA 推進事項

1. 韓中日 FTA 推進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의 논의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3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특히 1999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들의 마닐라 회동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11월 5일 부르나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 참가한 한·중·일 3국정상은 별도의 3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FTA의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진척시켰다.

특히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은 그 동안 기능적 경제협력 수준에 머물러 왔던 3국간 경제협력을 제도적 경제협력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실질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3국간의 FTA체결에 앞서 우선 협력분야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둘째로 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국제협력, 셋째로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넷째로 관광시장의 개방과 역내관광상품의 연계추진, 다섯 번째로 소위 AMF(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메커니즘 구축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Ⅲ-1〉 한·중·일 정상 브루나이 회담 결과

	합 의 사 항	세 부 내 용
1	경제(통상)장관회의 신설	-3국간 무역원활화 등 상호교역 증진 -통상마찰 예방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정책강조 협의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공조 협의
2	비즈니스 포럼 창설	-3국 주요경제단체 및 기업인간 연1회 포럼 개최 -비즈니스 정보교환, 통상, 투자환경 조사단 파견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추진방안 합의 -3국 민간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화
3	외교장관회의 및 실무협의체 창설	-3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향후 추진 방안 합의
4	경찰협조제제의 강화	-국제테러 및 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공동 대처
5	문화/인식교류 및 IT공조체 강화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IT표준화협회' 창설 및 공조체제 강화 -2002년 '국민교류의 해'를 계기로 3국간 문화/인적 교류강화 -3국 연계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3국 예술인으로 구성된 '베세토 오페라단'의 순회공연 등 문화교류행사확대

한·중·일 FTA구상과 더불어 최근 중국에 의해 제기된 동북아시아 지역무역협정으로는 소위 한국, 일본, 중국, 홍콩간의 '3국4자 FTA이다. 3국4자의 총인구는 세계총인구의 23.9% 구매력평가기준 GDP의 비중은 16.7% 13.0%, 외환 보유고는 6,148억 달러로 세계3대 FTA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3국4자가 타당성을 지닌 점으로는, 첫째, 중국제조업의 인건비가 저렴하여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둘째, 도시지역의 인적 자본이 여타개도국에 비해 높고,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은 홍콩, 일본, 한국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셋째, FTA 설립에 따라 세계최대의 제조업생산기지로의 부상 가능성, 넷째, FTA는 중국의 시장경제개혁과 개방형 경제구축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일체화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유발하여 지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중국은 3국4자 자유무역지대 창설 안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이미 자유무역지대이며, 일본과 한국은 관세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중국의 명목관세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국이 WTO가입이후 관세를 인하하고 자국의 국내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중국으로 하여금 3국4자간 FTA를 적극 제안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韓 · 日 FTA 推進

현재 WTO 회원국 중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만 아직 아무런 지역경제협력체에 가입하지 않아 가입국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동북아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될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으로서 아직 한국기업들의 對日 경쟁력이 미흡하고 일본의 유통시장이 배타적인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간 경제협력이 국제적 대세임을 감안하여 한국기업이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한·일 FTA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003년 10월 20일 방콕에서 APEC 정상회담시에 양국회담에서 FTA를 2005년내에 실질적 타결목표로 협상에 합의하였다.

일본도 최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추진에 적극 나서 한·일 경제협력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계는 한·일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 걸음 나아가 업종별 한일협력 내용과 원산지 규정 등 FTA 협정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동아시아 정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해양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경제적 결합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한다는 대외경제전략을 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가 성립된다면, 경제규모는 경제인구 1억7천만명, GDP 5조달러로 세계 GDP의 17.8%, 미국경제의 2/3에 해당하는 거대경제권이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12) 한·일 자유무역협정(KJFTA) 논의는 그동안 한일 양국간의 과거사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주의적 경쟁, 한일간의 경제적 격차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의 관점에서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유지, 일본경제의 구조 조정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일본이 최근 동아시아 경제공간에서 자국의 역할 증대와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이러한 동향은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NAFTA와 EU의 지역주의 강화로 말미암아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로서는 통상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둘째, 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발생후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불가분성 및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12) 조선일보 2003. 10. 13(종합 A6면)

셋째, 일본의 장기불황과 세계경쟁의 격화에 따른 국제간 특히 동북아 국가간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넷째로 중국이 WTO가입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슈퍼파워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약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다재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이러한 내심은 상하이 APEC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JSEPA)을 체결하고 2002년 4월부터 JSEPA체결은 WTO에 가입하는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 경제협정의 범위에 대해서 일본 통산성은 한국과는 쌍무투자협정(BIT)에 한해서만 교섭단체가 있으며, FTA에 대해서는 연구상태에 있는 곳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부문별 경제협정(SEA : sectoral economic agreement)의 하나인 호인증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문제에 대해서는 숲 산업을 포괄하기보다는 산업별로 추진하는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쌍무투자협정(BIT)을 체결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9번째 BIT체결국이 되는 셈이며, 이중과세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일 조세조약’이 일본의 기존 한국진출기업들의 재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신규 對韓투자는 유통, 무역, 서비스업 등 비 무역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KJFTA가 체결되면 양국기업들은 역내시장에서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표Ⅲ-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 관세인하 효과는 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의 무역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Ⅲ-2〉 CGE모형에 따른 KJ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국가	경제변수	후생 수준 (%)	등가 변화	실질 GDP (%)	수출 변동 (%)	수입 변동 (%)	무 역 수 지		
							대일본/대한국	대 제3국	대세계
한	국	-0.19	-7.66	-0.07	2.32	3.40	60.90	45.36	-15.43
일	본	0.14	62.32	0.04	0.50	1.09	60.90	-68.46	7.56

즉, 일본의 현재 관세율이 2.9%수준으로 한국의 7.9%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태적으로는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TA에 따른 역내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 달성, 생산성 향상, 비관세 장벽의 철폐, 일본자본의 투자유치 등 동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후생수준이나 실질GDP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표Ⅲ-3〉 KJFTA의 정태적·동태적 효과비교

구 분	정태적효과	동태적 효과	전체효과
후 생 수 준	-0.19	11.43	11.24
동기변환(억달러)	-7.66	462.65	454.99
실 질 G D P	-0.07	2.88	2.81

한편,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KJFTA는 필요하며 외국 기업들은 확대된 역내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생산비가 높은 일

본보다는 생산입지조건이 유리한 한국을 투자대상지역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다. 또한 FTA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아무튼, KJFTA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접지역 지역무역협정간의 통합에 대비하고 미국의 독주를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KJFTA는 동북아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여 이를 모토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역내국간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촉진, 기술개발, 합작생산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위상강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구조와 기업간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KJFTA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조기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JFTA로부터 한국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 및 인력이동 자유화, 통관절차 및 기타 무역원활화 조치, 호인증협정(MRA)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분야와 환경분야,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산업분야는 제외시키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등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KJ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中國의 FTA推進

1997년 시작된 아시아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IMF, 미국,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특장 지원으로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주변국으로 확장. 즉각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주룽지 총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내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아시아국가와의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고,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실질적으로 역내교역 증진과 역내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간 배타적인 경제협력으로 인한 역외국의 상대적인 차별을 직면하게됨에 따라 멕시코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증가로 주력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섬유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최근 국가간 지역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등 세계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어, WTO가입에 따라 관세인하, 시장개방 등 보호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획득과 2001년 이전까지 중국 통상정책의 초점이 WTO 가입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WTO 가입이후에 증대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FTA체결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첫 번째 대상국으로 선정된 아세안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인 위상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주도권 강화를 시도하고 동아시아 전체적인 지역협력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 지배세력에 대한 견제효과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표Ⅲ-4〉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단계

대상국	주요추진경과
아세안	<p>FTA체결 기본협정 서명으로 FTA 체결 공식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룽지 총리, 중국-ASEAN 경제협력에 위한 연구협력 제안(2000.11) - 중-아세안 10년내 FTA협정 발효 합의(2001.11) - FTA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협정 서명(2002.11) <p>(Framework Agreement on ASEAN-China Economic Cooperation)</p>
한국 및 일본	<p>연구·논의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룽지 총리, 한중일 FTA 공동연구 제의 (2002. 11) - 한중 FTA공동연구 제의 (2002. 11) · 국무원발전연구중심내 한중일 경제협력 연구팀 구성
아세안+3	연구·논의 단계
미국, EU 등	기초 논의 단계

4. FTA 推進方向 및 各國의 立場

한국이 FTA 추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였는데, 물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이후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며 동협상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거점국가와의 FTA를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일본과의 FTA도 논의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한·일 양국은 그동안 지역협정이 가져오는 정치·경제적 이익에 무관심하였으나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양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적 실리확대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FTA대상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다음으로 중국, EU, ASEAN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내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가장 유망한 FTA 상대국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 10~20년 후를 고려하며 중국도 유망한 대상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해 나갈 여러 FTA가 '거의 모든 무역'을 포괄하기보다는 제각기 상당수의 예외품목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얼마 전 체결된 일본·싱가폴 FTA에서 농산물들이 원칙적,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던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비경제적 측면에서 외견상 EU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EU가 한국과의 FTA체결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 기간 내에 EU와의 FTA추진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FTA대상국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기적으로 중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U와의 FTA는 EU의 대아시아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원래 지역 불력화에 반대해 왔는데, 미국, 유럽, 일본의 FTA 움직임에 자극 받은 중국 지도자들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2001년 2월 중국 하이난 섬에서 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주룽지 총리는 3월 인민대표대회 제10차 5개년 계획 발표자리에서 “다각 무역체제 및 지역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일본과 한국의 FTA 체결을 향한 움직임, 일본·싱가폴간 FTA 체결 등 지금까지 2국간에서도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FTA 체결의 움직임이 적었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이 중국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ASEAN간 FTA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본, 한국과의 FTA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FTA 체결을 위해 교섭중인 중국과 ASEAN은 광공업제품 자유화에 앞서 8개 농수산품의 관세를 오는 2005년 중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양측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전망으로 인구 17억에 이르는 거대한 FTA는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ASEAN 협상과 관련하여 태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은 쌀, 식육, 어패류, 야채, 과일 등 8개 분야인데, 2001년 11월 가진 정상회담에서 “10년 내에 FTA를 체결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자유화를 앞당기는 조치로 그간의 사무급 회담만으로 이들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철폐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농업분야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것은 ASEAN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중국이 2001년 4월 준비모임에서 제안했고, 농산물을 주력수출품으로 하는 ASEAN측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FTA구상이 단숨에 진전됐다.

일본은 지금까지 WTO의 다국간 무역교섭을 우선한 나머지 양국 간 교섭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등에 의한 수입장벽으로 일본기업은 구미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패해 연간 4,000억 엔의 수출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H·싱가폴간의 FTA 체결을 계기로 FTA가 일본 대외 통상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FTA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2002년 1월 체결한 싱가포르, 조만간 정부가 교섭개시에 합의할 멕시코와 함께 ASEAN가입국, 한국과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이 이들 국가들과의 FTA교섭을 우선하는 것은 일본과 무역액이 많은 동남아 지역이면서 관세율(단순평균)이 필리핀이 25.6%, 태국 25.8%, 한국 16.1%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날로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이 FTA를 이용해 ASEAN에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높이는데 대항한다는 목적도 있는 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WTO협정 이행상황이나 ASEAN과 추진하고 있는 FTA교섭을 주시한다”는 입장을, 일본과의 FTA체결을 호소하고 있는 대만은 “체결이익이 크지 않다”며 중국, 대만 쌍방과의 FTA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캐나다, EU와는 일본의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1) 일본의 최근 동향

한·일 간에는 이미 1998년 이후부터 민간차원에는 한·일 FTA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논의를 시작해 왔으나 그 동안 일본은 다자간 FTA에 대하여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2001년 7월 일본 정부에 대하여 FTA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이것이 최근에는 더욱 강력

하게 일본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일본-싱가폴 FTA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는데 이 FTA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민감 부문인 농산품부문을 배제시킨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ASEAN과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캐나다, 호주, 칠레가 각각 일본과의 FTA를 제외해 놓은 상태에 있다. 13)

일본이 1998년 10월부터 한·일 FTA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 시작한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Okuda, Satoru는 우선 다자간협상의 시간적 효율성 저하(예 : APEC)를 근거로 일본은 양국 간 FT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확대되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협정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의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한다고 했으며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 경험을 계기로 통화위기 피해국들의 관계강화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고, 최근에는 그동안 너무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일본경제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경제는 최근 국민들의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추세 및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축소 문제,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개선에 대한 기대 감소, 일본 수출시장 성장의 불투명성, 일본기업의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수출증가를 그 타개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출증가는 곧 일본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3) 김도형 “한일 FTA관련 주요쟁점 논의 배경” 「2002 한중일 FTA남경국제정책통상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 FTA는 일·싱가폴 FTA를 토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실천계획으로 관세인하, 세관절차 간소화 분쟁해결, 상호인증, 투자관련문제, 지식소유권 문제,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에 대하여 일·싱가폴 FTA를 그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한·일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국내학자들의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을 FTA 대상국으로 선택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무역거래상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으며, 일본의 수출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공급구조가 세계적합성 차원에서 볼 때 그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득수준 증가도 일본의 FTA 대상국 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14)

그러나 일·싱가폴 FTA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의 농산품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는 한·일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타국과의 FTA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의 최근 동향

2001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승인되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의한 비준절차를 거쳐 2002년 1월에 WTO 정식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15)

14)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고 국회비준 절차만 남아 있으며 한-ASEAN FTA를 검토중임. 멕시코에 FTA에 FTA를 제외해놓은 상태에 있고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각국은 한국과의 FTA를 제외해 놓은 상태에 있다.

15) 이동호 "중국WTO가입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2 한중일 FTA남경 국제정책동상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월

그동안 중국은 WTO가입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동북아 FTA 추진에는 별다른 열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2001년 11월에 ASEAN과 FTA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고, 2010년 타결을 목표로 현재 그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6)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점차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허가 및 쿼타제, 입찰관행, 지적재산권 보호 등 비관세장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시장도 점차적으로 개방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북경에서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말 중국의 GDP규모는 1,159백만 US\$로서 세계 제 6위이며, 향후 2020년까지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202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제 3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 이러한 중국이 2001년 11월 초에 있었던 ASEAN+한·중·일 회의와 ASEAN+중국 회의에서 중국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0년 안에 “중국 ASEAN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써 중국 ASEAN FTA의 실현은 중국과 ASEAN국가들의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촉진제 및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16) 2001년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52개나 되며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도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 이경훈 “동북아 FTA필요성과 한중 기업간의 협력” 『2002 한중일 FTA남경 국제정책통상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월

18) Cao, Shi Gong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합작의 신속한 발전과 중국의 대응” 『2002 한중일 FTA남경 국제정책통상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FTA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중국-ASEAN FTA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관한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ASEAN은 NAFTA와 EU의 거대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PEC의 비제도적 경제협력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우며,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역내 각국들은 자유무역의 거대한 혜택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ASEAN FTA의 형성은 NAFTA 및 EU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됨으로써 역내 국가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이익과 발전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적인 국면의 해소에도 상당부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회원국들의 평등한 권리와 공동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ASEAN이 지난 10년 동안 지역 협력에 있어서 그 핵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바지해 왔기 때문에, ASEAN의 이익과 요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ASEAN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중국-ASEAN FTA의 추진에 관한 협상시 ASEAN의 핵심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면서 원만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한·중·일 FTA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포함시키는 하나의 경제협력체가 출현하게 되는 경우 미국의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경제주도권에 매혹되어 중국의 발전을 제어하려 하고 있으며, 자국의 민감 부문에 과도하게 얽매임으로써 농산품 자유무역을 개방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문제에 관한 태도도 주변국들의 저항감을 계속적으로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ASEAN과 FTA에 전념하고 있으며, 동북아 FTA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경제일체화가 실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서는 한·중간에는 양국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력의 의지가 있으며, 한·중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지리적·문화적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 이유는 주도권 쟁탈문제가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2절 FTA의 課題

1. 韓·中 FTA의 課題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측이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중국은 중국의 화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ASEAN국가들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까지 중국-ASEAN FTA를 개설할 것에 대하여 이미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동북아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ASEAN 자유무역지대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처리해 나가겠다는 기본전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일 FTA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 FTA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난 후에 한·중 FTA를 실현시킨 후, 한·중·일 FTA를 하나로 묶겠다는 커다란 틀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로서는 동북아 FTA의 건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FTA를 형성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국 간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해결로 파악하고 있다. 즉 중국은 취약한 부문에 대한 민감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최대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ASEAN FTA에서는 ASEAN시장에서의 중국상품의 충격제거가 그 핵심문제로 중국정부는 파악하고 있는바 일방적으로 중국의 수출확대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닌 중국의 수입에 대한 개방도 촉진 시킴으로써 ASEAN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상품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상품이 ASEAN 전체시장을 장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광활한 중국시장이 ASEAN의 많은 상품들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ASEAN의 요구대로 동남아 주변국들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3개국에 대해 특수 우혜 관세대우를 제공해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농산품이 가장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에 있어서 농산물 문제는 언젠가 해결되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국내 농민들이 한국정부의 중국과의 마늘협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단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대외협상에 임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내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조조정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합리적이고도 장기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측에서 “농산물 개방은 절대로 없다”라고 농민들에게 천명해 놓고 일순간에 개방협상안에 합의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한·중 FTA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논의만 서서히 시작되고 있을 뿐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민감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이 아직은 한·중 FTA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韓·日 FTA의 課題

일본은 성공적인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한·일간의 관계강화를 계기로 한·일 FTA에 대하여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실현,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FTA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무역적자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일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결국 한·일 FTA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국 투자확대와 무역역조 문제의 해결이 급선부라고 할 수 있다.

한·일 FTA 실현시 기계류, 부품류, 소재부문 등에 대한 일본의 대 한국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없는 한국에 직접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즉 한국과 일본은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한·일 FTA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으로서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의 투자적합지역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도 결코 일본기업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으며, 한·일 무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와 일본 농림수산성의 강경 자세 등은 한·일 FTA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싱가폴 FTA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농산품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일 FTA 뿐 아니라 특히 중·일 FTA 및 한·중·일 FTA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한·일 FTA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FTA에 대한 기초연구와 실증적 검증이 전무하며, 양 국간 FTA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현격히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일본측은 최근의 일본·싱가폴 FTA의 경우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을 현 상태에서 동결, 민간분야 추가협상 등의 여지를 남겨둔 채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에 역점을 둔 포괄적 경제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포괄적 연대 협정에 동의하면서도 일본의 농수산물 추가개방,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대한투자와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피해 보상조치의 사전 명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일 FTA 실현시 자본축적 및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한국의 후생효과 증대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할 뿐 심도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일간에 기술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후생효과는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본이 농산물과 경공업제품에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의 공동인식에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일 FTA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NAFTA나 EU 등과 같은 경제협력체들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동북아 FTA' 실현은 물론 'ASEAN+동북아 FTA'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아직은 한·일 FTA가 시기상조이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식의 장기적 협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Ⅳ장 FTA 問題點과 對應戰略

제1절 韓·中·日 FTA의 問題點

현재로서는 한·일 FTA와 관련하여 일본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는 그 진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그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이냐가 그 관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역사왜곡 문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에 일본이 집착하고 있다는 측면 등이 매우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유보적인 태도가 단기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NAFTA와 EU의 빠른 발전적 유형을 보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제의했을 때 자국의 주도권에 시종 집착하였으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고려하여 미국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는 한·중·일 지역경제협력과 동아시아 FTA에 대한 일본의 불분명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요인에만 그 초점과 맞추고 있으나, 사실상 한·중·일 FTA가 실현되려면 경제발전수준은 물론 지리적 근접성, 각 정부의 통상정책, 공동체 의식구조의 강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설득력을 갖고 있으

며 동북아(한·중·일) FTA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려면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지리적 근접성과 관련하여 북한이 동북아 FTA에 포함되어야 Land bridge를 통한 물류기능이 TCR(중국대륙횡단철도: Trans-China Railway), TSR(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 Trans Siberian Railway)로 연결됨으로써 강화될 수 있으며, 경제발전수준 역시 한·중·일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은 물론 북한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각 국의 통상정책이 현재로서는 상이한 측면이 매우 강하며, 일본은 특히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공동체 의식구조의 강화와 관련하여 아직도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배타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물론 한·중·일 FTA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써 NAFTA와 EU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FTA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동북아만이 아닌 ASEAN과의 협력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는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1. 農産物 交易問題

농업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각 국의 국내정치와 자원민족주의적 민족문제까지 비화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하다. 이 때문에 농산물 교역문제에는 정치성이 개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한·중·일 FTA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농산물 교역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교역에 관한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과거 UR 협상과 뉴라운드 다자간 농산물 협상에서 잘 드러난바 있지만, 개별 국가 간 FTA성패도 농산물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칠레 FTA 협상과 일·싱가포르 FTA 협상이다.

한국과 칠레 농산물은 계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FTA 협상은 칠레 산 농산물의 제외품목 문제 때문에 전체 협상기간 3년 중 2년 반을 끌었다. 반면에 농업분야가 거의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일본의 FTA 협상은 비교적 무난히 타결되었다.

일본의 첫 FTA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데는 농산물 협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교역에서 농산물의 비율은 0.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농산물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나라의 FTA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자민당 농수무역조사회와 농업 단체들은 농수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조직적으로 강하게 주장한바 있다. 결국 농산물은 모두 제외되고 금붕어 수입관세 인하 문제만이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겨레신문, 2002. 5. 18). 농산물 교역문제를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FTA 협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농민들의 거센 반대 때문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조차 어려움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만으로도 외국농산물의 대량수입 증가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한 토지집약적 농산물인 식량과 면화 같은 작물재배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그로 인해 200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2.3%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부문의 대량실업발생이 불가피해졌다.

그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미 증폭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 교역문제는 단순히 농업이 산업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일·중 FTA를 위해서는 사전에

농산물 교역문제를 따로 떼어 신중하게 해결점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제도적 장치만으로 무역 분쟁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관한 분쟁은 국내 수급조절의 실패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한·일·중 어느 나라이든 국내 농산물수급조절의 실패로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다른 산업의 마찰로도 확대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수급조절의 방법은 시장의 자율조절에 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3국은 FTA 협상이전에 농산물 수급조절의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정비가 필요하다.

2. 産業構造調整 問題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협상이 공식화되는 순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분야는 적지 않다. 기업들은 상대국의 기업이 폐쇄적이거나 산업이나 기술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협상에 반대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시장개방에서 수입 다변화 정책과 같은 제도적 장벽의 제거 문제도 쉽지 않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없는 한, 한·중·일 FTA는 협상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장기간 일본의 발전모형을 추적해온 결과, 한국과 日本의 산업구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기술격차는 뚜렷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중국의 산업구조는 한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은 산업구조조정의 어려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직적 분업의 형태로 쉽게 진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10년에 걸친 장기적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이러한 차별성은 크게 좁혀졌다. 한국의 R&D 투자의 결과가

높은 기술진보와 결과로 나타나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과 일본 생산거점의 대중국 이전 등으로 기술축적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몇 개 분야는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져 역내기술 격차가 크지 않게 되었다. 이런 분야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알맞은 수평적 분업체계가 이루어지려면 산업구조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IT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은 역내국가들간의 산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통합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들은 고효율의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낮춘다. 더욱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기업들이나 금융권은 모두 위험부담이 큰 대규모 투자보다 안정성이 높은 기술중심의 사업이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도 한·중·일 FTA 추진에 필요한 산업구조 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50~100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서부대개발도 넓게는 한·중·일 FTA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내적으로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부강과 함께 서부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다지려는 것이다.

중국은 서부대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한·중·일 자유무역지역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동북아보다 지리적으로 접근이 유리한 동서남아와 서방세계와의 연계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 한·중·일 FTA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 뻔한 한일이다.

3. FTA 締結의 障礙要因과 留意事項

(1) 장애요인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의 압력과 국내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협력에 소극적이며 일본은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실익은 작은 반면, 지역주의 강화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중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과 지역주도권 선점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미일군사 동맹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로 인한 중국의 불안감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시장을 개방코자 하는 중국과 농산물 분야를 유보하려는 일본, 한국과의 이해 상충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된다고 보고 있다.

※ 미국은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임

(2) 유의 사항

중국은 일본의 FTA 추진에 대응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산업의 구조조정, 한·일 FTA, DDA(도하개발아젠다) 19) 협상 타결 여부, 미국중심의 FTA결성 등에 따라 중·아세안 FTA가 목표시한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양허안에 대한 ASEAN내부의 시각차, 중국의 고관세 구조등을 고려할 때 중·아세안간

19)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란 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종료된 WTO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를 뜻한다. 농업,공업,서비스등 모든분야의 무역자유화를 논의하며 WTO회원국은 2003. 3월이후부터 오는2005년까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상당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중·ASEAN간 FTA 논의가 한·일 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중국이 아세안에 부여하는 양허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논의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중·아세안 FTA에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다.

최근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의 검토를 제의하자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한 바 있다.

제2절 北美·EU와의 關係

1. 對美 政治·經濟的인 關係

동북아에 형성되는 경제블록은 말할 것도 없고 한·중·일 FTA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중·일 FTA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경제협력체의 구축에 대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입증된 바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가 제안한 EAEC(East Asian Economic Conference)에 관련국들에게 강하게 불참 압력을 가하여 결국 EAEC를 무산시켰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이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을 주도했을 때도 미국 국무부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미국은 아직도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선린·협조 관계가 IMF에 대응하는 AMF의 창설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지역 통화시스템도 반드시 IMF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야만 미국은 IMF를 통해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간의 통화스왑²⁰⁾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세계 금융의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데 그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의 ASEAN+3을 통화 단합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FTA도 미국은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그것을 미국의 시장지배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시적 반대 외에도 한·중·일 3국의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는 3국만의 자유무역지역의 구축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2000년) 한·중·일 3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중국 20.9%, 한국 21.8%, 일본 29.7%나 된다. 일본의 대미 수출 비중은 동북아 역내수출 비중(25.9%)보다도 높다.

20) 통화스왑(currency swap) :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거래임. 즉, 일정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타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로서, 주로 환리스크의 헤징과 자금플로우 관리에 널리 이용됨.

한·중·일 3국만의 FTA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역외 국가인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내에 미국을 대신하여 수출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 중국은 충분히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일본은 구매력에 비해 역내무역비중이 매우 낮으며,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한 중국의 국민소득 규모는 일본보다도 큰 세계 2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장기적으로도 한·중·일 3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기가 어렵고 일본과 중국의 역내시장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중·일 FTA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은 필수적이다.

2. 北美 EU와의 關係

FTA 추진 목적이 EU 확대와 NAFTA가 EEA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임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일본과 중국의 구상과 정책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이 구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성사되면 세계경제는 동아시아, EEA 및 광역 EU의 3대 경제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세계후생은 증가할 것이다. Krugman(1991)은 이론적으로 세계 무역블록이 3개이고 역외 관세율이 20%이상일 때 세계 후생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WTO 관세양허에 의해 그러한 고율 관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3대 경제권으로 분할되더라도 세계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도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를 비롯한 반미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 경제력의 커지는 것도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중화 경제권이 강화되어 중국에 의한 동아시아 지배체제가 구축될 것을 우려한다.

중국경제가 발전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경제는 붕괴론이 제기될 정도로 금융부문의 부실이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개혁과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경제위기를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 함께 공동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뜻한다.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과 함께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고서는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안전망 구축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AMF는 모두 앞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도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대미 교섭에서 한·중·일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치된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이 포함된 지역경제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미국을 포함시키는 4국 FTA나 NAFTA와 한·중·일을 연계하는 태평양 횡단(Trans-Pacific) 자유무역지역(TPFTA)의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협정연계형은 TPFTA는 신지역주의 추세와 합치될 뿐만 아니라 광역 FTA의 효과 증대의 이점도 있다.

더욱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개입된 동북아의 갈등에 의한 장애요소 제거와 미국의 협력 획득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제3절 FTA의 對應戰略

한국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식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구 등의 주요거점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우선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추진을 위한 실무그룹간 실무협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되며, 그간 FTA의 경험이 없던 우리로서는 FTA협상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만 이미 10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과 선진화된 경제관련 규범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FTA협정을 처음 맺는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완화하면서 FTA하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국가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주요 교역국들과 FTA협상을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FTA협상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차원에서의 세심하고 치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및 FTA 형성에 따른 域外國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한 농산물, 서비스 등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 따라 국내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무역자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큰 이익보다는 특정 계층의 손실이 더 강조되는 면이 있으므로 무역자유화, 특히 배타적 지역무역블리하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무역자유화로 퇴출될 산업에 고용된 자원의 재배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좋을 것인지 그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政府次元의 對應戰略

첫째,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WTO를 통해 지역주의화(Regionalism)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지역주의화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면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비가맹국에 대해 공개적인 지역주의의 성향을 보임으로써 비가맹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동시에 수출시장과 교역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해당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먼저 FTA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물론 FTA를 통해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유무역협상이 체결되면 가맹국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산업구조가 수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TA 추진시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원론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투자협정을 먼저 경쟁력을 확보한 뒤에 FTA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전에 먼저 국내경제 및 산업환경의 점검을 통해 FTA협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경제 및 산업기반이 취약할 때, FTA추진을 오히려 국내경제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먼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의 완화,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成功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이 갖추어진 후에 FTA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처음부터 일괄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대상국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에 하나다

2. 企業次元의 對應戰略

기업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FTA 체결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기업이 FTA 체결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의해 발생하게 될 주변국과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기업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FTA가 반드시 가맹국 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역내·외에서 겪게 될 통상마찰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가맹국간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기 때문에 가맹국 기업들간의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전에 미리

기업내의 비효율적인 경영 및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가맹국 선진기업과 비교할 때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업과의 합병이나 제휴 또는 선진기업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유무역협정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국내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집중적인 국내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침체되거나 도산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 경쟁열위에 있는 산업은 비교우위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가맹국 내로 이전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더욱 증대시켜 외국기업으로 부터의 추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경영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즉 경쟁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있어서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3. 農産物市場開放 對應戰略

농업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분야중 하나이다. 그 원인은 첫째로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공업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국가의 자원(외화,인력,금융등)을 집중함으로써 농업은 국민

의 식량공급을 위한 수단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국가에 대한 불만과 농정에 대한 불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농촌을 쾌적한 삶의 영위장소로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낙오된 자들이 머무는 장소라는 체념들도 많이 하고 있다. 둘째, 농업은 전국에 산재한 농민들에 의해 영위되는 산업으로서 정치적으로 농민은 지역주민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농가의 연간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하여 낮으며, 일부 뜻 있는 전문 영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기피하고 있는 분야라고 있다.

농업이 국토보전과 안보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농촌을 국토의 균형적 활용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농업에 뜻을 둔 전문인력이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이 농업을 영위할 때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영농규모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기술 및 시설확보, 생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확립 등 영농기반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고령농가 혹은 전통적 농업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탈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봉한 농지가 전문 영농가에게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FTA 추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국 경제의 후생증대에 있는 만큼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대책도 농업 산업적, 시장외적 기능을 고려하여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전략이 필요하다 즉 FTA를 참여국간 자유무역을 통한 후생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되 양(+)의 외부성이 있는 품목,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국내생산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농가에게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은 FTA를 통한 일국의 잠재적 후생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FTA를 원칙대로 추진하되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중 다기능성 즉 양(+)의 외부성과 식량안보 등 공공재적 기능이 확인된 품목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적정생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외부성의 정도 혹은 적정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의 지원을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경제적 후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대안이다.

또 하나는 FTA를 추진하되 주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 대안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특정 농산물에 대해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별도의 조치에는 계절 관세 등과 같은 탄력조치, 농산물 무역분쟁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여국간 별도의 위원회설립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간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과 FTA를 진행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를 보면 농산물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수회에 걸친 양허안의 교환, 주요 문제에 대한 협상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끈기와 설득력, 또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관심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대안들이 실제로 국민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의 시행이 따라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논 농가에 대해 시행한 직접지불제도(directpayment),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보험제도 등 소득위험관리(income risk management)정책 등이 그 사례로 보일 된다.

제 V 장 結 論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신 패러다임속에서 한국의 주요교역국들은 지역위주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반덤핑제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적 무역권의 성질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도 한·중·일 FTA는 절실한 실정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과 함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아세안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FTA의 당위성이 요구된다.

한·중·일 FTA로 자유무역지역이 구축된다면, 3국 경제발전의 역동성은 가속화하고 신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로서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對美 교섭에서 한·중·일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치된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이 포함된 지역 경제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상존하고 있는 강제, 군사, 정치부문의 패권주의를 견지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새로운 동태적 성장의 기회

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쌍무적경제협력 한계성을 극복하고 域内 國의 다각적이고 집단적인 노력과 지원에 의해 남북간의 경제통합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외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동북아 FTA체결의 전략적인 통상정책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농업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서 농산물 교역문제는 단순히 농업이 산업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므로 한·일·중 FTA를 위해서는 사전에 농산물 교역문제를 따로 떼어 신중하게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FTA를 참여국간 자유무역을 통한 후생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되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농가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여 농촌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 3국간의 FTA를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함과 동시에 기존의 광역경제협약체인 APEC역내 국지경제권과의 FTA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륙 육로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한국은 한·중·일 3국간 육로네트워크의 구축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동북아의 경제통합체 형성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부상할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중심 축으로서의 황해인안·서해안지대의 개발전략과 황해중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인수외7 국제통상론 2001. 박영사 p116
- 곽노성 「자유무역협정과 한국농산물시장의 개방」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2001. 12 PP 277-295
- 권영민, 박승록 외 2001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도형 외. 1999. 12. 「韓·日 自由貿易協定の 産業別影響과 對應戰略」. KIET정책자료 제151호. 서울 : 산업연구원.
- 김동만 「FTA와 한국에의 정책적합의」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2002. P291~318
- 김선광 「동북아 FTA의 과제와 대응」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2호 2002. 10
-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제12권 제4호 1999. 8
- 김양희. 2001. 5. 23. 「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김종걸. 2001. 「韓·日自由貿易協定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현 「동북아 지역경제통합과 역내 FTA추진에 관한 고찰」 「中蘇研究」 통권 93호(2002)
- 권영민·박승록 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농림부 www.maf.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アジア經濟研究所. 2000. 5. 24.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책방향」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 보고서.
- 무역협회 www.kita.net
- 문영훈. 2002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그 경제적효과에 대하여” 「고시연구」
2002. 12월호
- 박순찬. 2001. 5.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과 자본축적」. 대외경제전문가
플 토의자료 2001-17.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제훈. 2002 “동북아공동체실현은 범지식인 공동 연대로부터” 「나라경제」
2002. 5월호 KDI경제정보센터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손찬현 편. 2001. 3.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韓·日, 韓·美, 中·日 FTA를 중심으로 - 』. 정책
자료 01-01.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은희. 2002.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의 한중일 FTA모색과 전망”. 한국동
북아 논총 제23집 (2002)
- _____ 2002 “WTO 뉴라운드 전망 및 자유무역협정의 대외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2 국가안보정책연구소
- 월간무역 2003. 2월호 “FTA의 의미와 영향”(외교통상부 김병섭. 정인교)
- 이경태.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봉출판사 2001. 11
- 이경훈. “동북아 FTA 필요성과 한중 기업간 협력” 「2002. 한중일 FTA
경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 통상학회. 2002. 7
- 오용석. “한일중 FTA의 당위성과 동북아 변수” 「동아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2002. 1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정인교. 2001.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책자료 01-03.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선일보 2003. 10. 13(종합 A6면)

한중일. 산업협력 심포지엄. 2000. 11. 22. 「디지털 시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동아일보사·삼성경제연구소.

해양수산부 www.nomaf.go.kr